#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최소 50%…산업계 '초비상'

2035년까지 '50~60%' · '53~60%' 2개 감축안 제시 산업계 마지노선 48%보다 높아…기업들 "과도한 목표" 광주 자동차·반도체, 전남 석유화학·철강 타격 불가피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제시하면서, 미국발 관세 압력 등으로 역대 급 위기를 겪었던 산업계에 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 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산업계 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하한선 48%를 크게 웃돌 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NDC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되는 제조업종

은 자동차와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으로 대부분 이 광주·전남대표 산업과 밀접해 지역 산업계도 초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 (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이러 한 최종 후보 2가지를 공개했다.

최종 2035 NDC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

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그 다음주 유엔에 제출된다.

두 안은 상한선이 60%로 같지만, 하한선이 모두 산업계가 제안한 48%보다는 높아 기업들 사이에 서는 과도한 목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자동차와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업계는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가 국내에 잘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달성하기 위해 선 탄소 감축 기술이나 설비에 큰 투자가 불가피해 신사업 등에 투자될 비용이 축소되고 고용 축소와 기업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완성차 공장 2곳 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도시인데다 반도체 기업의 월 수출액이 3~5억달러를 오갈 정도로 지역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또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은 전남의 대표 산업으로 현재 수출 부진 등으로 구조 조정 압박을 받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NDC는 배출권 거래제 할당과 연동돼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관련 기업들의 근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NDC가 제시한 수 준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배출권 부 족분을 시장에서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데, 이 비용 이 천문학적이라는 것이 기업들의 호소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철강, 화학, 시멘트, 정유 등 7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4일 2035 NDC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산업계 공동 건의문 을 내놓고 합리적 수준의 감축 목표, 할당량 설정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촉구했다.

반도체업계는 업종 특성상 다량의 탄소배출이 불 가피한 만큼, 우리나라에서 기한 내 NDC 달성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 자체를 떨어뜨 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업계 역시 현재 제시된 NDC에 따라서는 앞서 정부가 무공해차 비중을 30~35% 수준으로 높 이겠다고 밝힌 '2035년 무공해차 목표' 달성이 현 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철강업계는 정 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협력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이 커 정부의 지원이 필 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석유화학업계 역시 온실가 스 감축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했을 때 오는 2035 년까지 48% 감축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수능 마케팅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직원들이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합격 기원 찹쌀떡을 선보이고 있다. 롯 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3일 수능 당일까지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 안양 30년 전통 떡 장인과 유명 쉐프가 콜라보레이션한 상품으로 유명한 '여울원'은 팝업 행사를 열고 과일과 떡을 조합한 '합격기원 찹쌀떡'을 선보인다. '보향떡집'에서는 두바이 쫀득 쿠키와 찹쌀떡으로 구성된 '수능 찹쌀떡 선물세트'를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주요 투자은행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 높여…대부분 2% 육박

한 달 새 평균 1.9% 0.1%p 상향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내년 우리나라 경 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 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달 말 평균 1.9%로 집계됐다.

씨티가 기존 1.6%에서 2.2%로 전망치를 대폭 높이면서 평균치가 한 달 전인 9월 말(1.8%)보다 0.1%포인트(p) 높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 (1.6%)를 제외하면 나머지 IB 7곳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 치(1.6%)보다 높은 수치를 내놨다.

씨티를 비롯해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2.2%로 나란히 2%대 성장을 전망했다. 이밖에 노무라는 6.6%에서 6.0%로 전망치를 낮췄지만, 씨티가 1.9%, UBS는 1.8%, 바클리는 1.7% 등이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0%로 유지된 만 큼 향후 1년 사이 성장률이 배 가까이 상승할 것이 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셈이다.

JP모건은 9월 중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2.2%로, HSBC는 1.6%에서 1.7%로 각각 전망 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IB들은 수출이 올해 에 이어 내년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IB 8곳이 제시한 내년 우리나라 GDP 대 비 경상수지 비율은 9월 말 평균 4.7%에서 지난달 말 평균 5.3%로 크게 높아졌다. 골드만삭스가 4.4%에서 7.1%로, 노무라가 3.9%에서 6.6%로 각각 높이면서 평균치가 올랐다. 미국 관세 인상 에도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 가 크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2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1.6%)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은은 오는 27일 수 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장윤영 기자 zzang@

## 이재용, 다음주에는 벤츠 회장 만난다

### 세계 주요 기업 수장 연달아 만나 반도체・배터리 등 협력 논의 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다음 주 올라 칼레니 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과 만난다. 그간 이 회장이 전 세계 주요 인사들 및 기업 수장들을 연달아 만나며 성과를 내 온 만큼 이번 회동에서 는 전장 (차량용 전자・전기장비) 사업을 집중 논 의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재계와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오는 14 일 열리는 메르세데스-벤츠 콘퍼런스에 참석하 기 위해 방한하는 칼레니우스 회장과 회동 일정 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는 최주선 삼성SDI 사장,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 장도 동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음 주이 회장과 올라 회장의 만남을 통해 양 사 간 기존 협력 범위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 레이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삼성과 벤츠는 현재 차량용 인포테인먼 트 시스템, 디지털 키 등에서 협력 중이다. 삼성 전자의 전장·오디오 자회사 하만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럭셔리 전기차 EQS에 적용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BUX 플랫폼을 공급 하고 있으며 카 오디오에서도 협업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벤츠 주요 모델에 실물 키 없이 차량 잠금을 해제하거나 시동을 걸 수 있는 삼성 월렛 디지털 키를 적용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협업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디스플레이와는 이미 차량용 유기발광다 이오드(OLED) 공급을 위한 협의 단계에 접어 든 것으로 전해졌는데, 양사 수장 간 만남으로 해당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경영계, 노란봉투법 질의서 고용노동부 전달

#### "산업현장 혼란 최소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 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꾸리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며 "산업안전보건 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근거한 원청의 안전보건 과 관련한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 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

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 의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 실해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 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넓어 사용자의 경 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특히 생존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함에 있어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 등이 예상 되는데 이런 것들이 노동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 다"고 호소했다. 질의서엔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 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담겼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